



2011 한겨레신문사  
Communication on  
Progress(COP)

- 2 Special Report '아시아의 리스크' 리스크선별 아시아 사회책임경영 평가 기준?
- 3 한국 사회책임경영 우수기업 선정
- 5 2010년 CSR대상 우수기업
- 7 2010년 CSR대상 우수기업
- 10 HERI 2011
- 11 HERI Think Tank

한겨레경제연구소(HERI)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세상 만들기 프로젝트

2011년 12월

# HERI Review

□UNGC 지지선언문

□기업개요

□조직도

□한눈에 보는 2010년 한겨레

□□□UNGC 10대원칙

□□10대원칙 이행내용\_보도

□10대원칙 이행내용\_연구·교육

□10대원칙 이행내용\_경영



## 아시아의 눈으로 '동아시아 30' 찾아낸다

### 한·중·일 공동 사회책임경영 평가모델 첫 결실

2010년 10월 21일 발표된 한국·중국·일본 사회책임경영(ESG) 전문 평가 모델의 결실로 4국 기업들이 '동아시아 30' 리스트를 발표하는 데 성공했다. 아시아 사회책임경영 전문기관인 HERI가 주관한 이번 평가는 아시아 30개 기업에 대해 ESG 평가 모델을 적용한 결과를 공개했다. 아시아 사회책임경영 전문기관인 HERI가 주관한 이번 평가는 아시아 30개 기업에 대해 ESG 평가 모델을 적용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은 유럽 이후 두 번째로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ESG 평가 모델의 결실로, 아시아 30개 기업이 '동아시아 30' 리스트를 발표하는 데 성공했다. 아시아 사회책임경영 전문기관인 HERI가 주관한 이번 평가는 아시아 30개 기업에 대해 ESG 평가 모델을 적용한 결과를 공개했다.

### 30년 중 일본 20년, 한·중 5년만 평가 실무를 주관한 한국기업연구원도 이 모델

평가 실무를 주관한 한국기업연구원도 이 모델을 통해 첫 달 동안 100여 개 기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그리고 일본 기업들의 경우 20년, 한국 기업들의 경우 5년, 중국 기업들의 경우 5년 동안 이 모델을 적용한 평가를 진행했다.

### 일본 기업은 일본 사회책임경영 성과 보고서 중 상위 100개 기업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

일본 기업은 일본 사회책임경영 성과 보고서 중 상위 100개 기업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 한국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의 경우 20년, 중국 기업들의 경우 5년 동안 이 모델을 적용한 평가를 진행했다.

한·중·일 공동 사회책임경영 평가 모델의 결실로, 아시아 30개 기업이 '동아시아 30' 리스트를 발표하는 데 성공했다. 아시아 사회책임경영 전문기관인 HERI가 주관한 이번 평가는 아시아 30개 기업에 대해 ESG 평가 모델을 적용한 결과를 공개했다.

**사회책임경영 한·중·일 평가기준 30대 기업 194개사**

2010년 CSR 대상 시상식

2010년 CSR 대상 시상식

2010년 CSR 대상 시상식

<한겨레신문의 격월간 경제·경영섹션 HERI Review 2011년 1·2월호 표지화면>

1987년 창립된 한겨레신문사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인 참언론을 표방하고, 시대정신의 개척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국민들은 모금을 통해 한겨레신문사의 설립과 일간신문 <한겨레>의 창간을 도왔습니다. 1988년 창간된 <한겨레>는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독립언론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겨레신문사는 이제 그동안 키워온 참언론으로서의 자부심을 지켜가며,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고 확산시키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한겨레신문사는 2007년 UN글로벌컴팩트에 가입했으며, 두번째 보고서로 '2010 한겨레신문사 CoP'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한겨레신문사는 이 보고서에서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4가지 주요 분야에 걸쳐 한겨레신문사가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한겨레신문사는 1988년 5월 한국 개별언론사로는 처음으로 윤리강령을 제정해 공정정보를 위한 기본틀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바깥으로는 기사에 대한 독자들의 신뢰를 높이고, 안으로는 임직원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것 입니다.

한겨레신문사 사규는 UN글로벌컴팩트 10대 원칙에서 지향하고 있는 '인권보호', '노동권보장', '환경보호', '부패방지 및 척결'을 위한 세부시행 규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사는 국경을 넘어 세계시민으로서 위 영역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간신문<한겨레>, 주간지<한겨레21>과<씨네21>, 월간지<이코노미인사이트>, 인터넷한겨레, 웹방송하니TV 등 한겨레신문사 및 자회사가 발간 중인 각종 매체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취재 보도 활동을 수행할 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태도를 견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싱크탱크 한겨레경제연구소에서는 한국기업의 사회책임경영 성과를 평가하고 발전방향을 연구하는 등의 깊이 있는 활동으로 UN글로벌컴팩트정신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향후 지속적인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을 계기로 한겨레신문사는 UN글로벌컴팩트와 더욱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지속가능경영이라는 중요한 화두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한겨레신문사가 펼치는 다양한 활동들이 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겨레신문사 대표이사 사장 양상우

업체명 : 한겨레신문(주)

### 사업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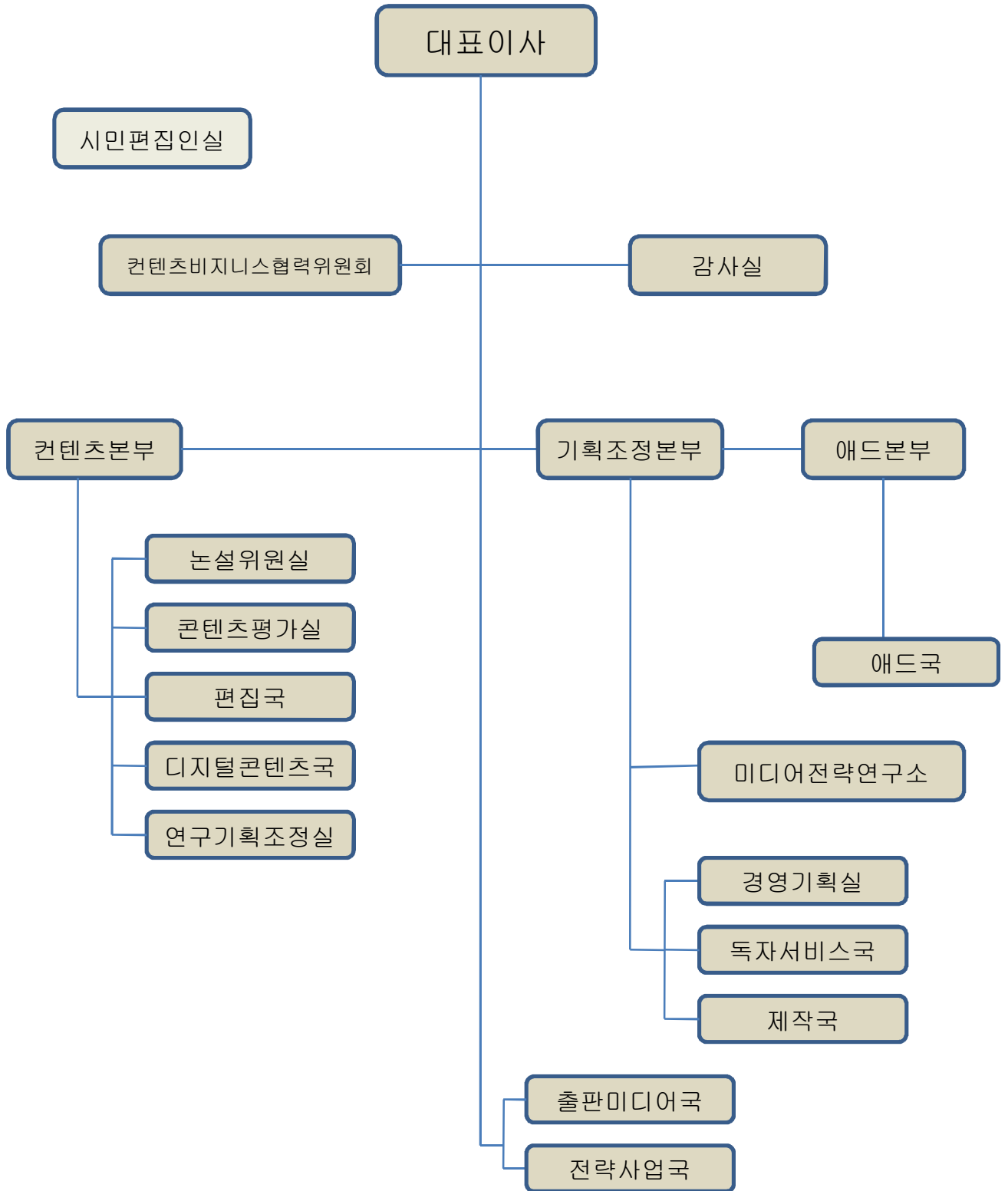
#### 제조업

- 신문 및 정기 간행물 발간
- 서적 및 출판 인쇄
- 기록매체 출판 및 복제
- 광고물 제작 및 판매

#### 서비스업

- 교육서비스
- 오락, 문화 및 스포츠
- 방송채널사용
- 부가통신사용
-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

임직원수	532명
UNGC 가입일	2007년 8월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16-25번지 한겨레신문사빌딩
연락처	1566-9595





보도활동



- 2010.02월 제41회 한국기자협회 한국기자상 한겨레 사회팀 수상 (노동OTL)
- 2010.09월 이달의 기자상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수상 (장애인 킨제이 보고서)

연구 및 교육활동

- 2010 아시아미래포럼 (Asia Future Forum) 개최
- 한중일 CSR 공동연구
- 한중일기업 사회책임경영 평가 East Asia 30



경영활동



- 노사협의회, 경영설명회 정례화
- 정규직 고용 비율 2% 포인트 증가
- 안정기 교체로 976 wh(시간당) 에너지 절감
- 윤리경영을 통한 신고 및 위반 건 수 제로화

**인권**

- 원칙1: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 원칙2:기업은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노동**

- 원칙3: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원칙4:기업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여야 한다.
- 원칙5:기업은 아동노동을 효과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
- 원칙6:기업은 고용 및 업무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

**환경**

- 원칙7: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여야 한다.
- 원칙8:기업은 환경에 대한 책임강화에 솔선하여야 한다.
- 원칙9:기업은 환경 친화적인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장려하여야 한다.

**반부패**

- 원칙10: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 모든 형태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겨레신문사에서는 UNGC 10대 원칙을 준수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관련 기사를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보도내용은 2010년 주요 보도내용입니다.)

분야	보도내용	성과
인권	""5·18진압명령 맞서다 정신질환" 유공자 인정" (한겨레신문, 2009년 1212) "선관위, 무상급식 운동 금지" (한겨레신문, 0319) "영구빈곤 보고서" (한겨레21, 803~806호) "참여정부때 허가받고 방북한 27명 3년 지나 '보안법 위반' 수사" (한겨레신문, 0616) ""박영준 사조직'의 민간인 사찰 의혹" (한겨레21, 0702) "최저생계비로 한 달 달동네 빈곤리포트" (한겨레신문 0801) "인권경영 없이는 기업도 없다" (한겨레21, 0906) "학생들 지켜보는데...교장이 '교사 영당이 체벌'" (한겨레신문 0909) "시위해산용 음파장비 도입 '인권침해' 우려" (한겨레신문 0928) "장애인도 하고 싶다, 살고 싶다" (한겨레21, 1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달동네 빈곤 리포트'는 국가인권위원회의 2010년 인권보도상 수상</li> <li>• 무상급식 운동을 확산시켜 시행되는 데 기여</li> <li>• 인권경영의 중요성을 알림</li> </ul>
노동	노동 OTL 기획보도 (한겨레21 2009년 1225) "노동자 5명중 1명이 '사내하청'" (한겨레신문 0119) "포스코 '4조2교대'로 바꾼다" (한겨레신문 0126) "삼성반도체 발암성 물질 6종 사용 확인" (한겨레21, 05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삼성반도체 발암물질' 보도로 13회 엠네스티 언론상 수상</li> <li>• 취약한 노동환경을 고발하고 노동조건개선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li> </ul>
환경	"낙동강 퇴적토 조사 않고 정부 "문제없다" 거짓 해명" (한겨레신문, 0210) "남한강서 수리부엉이 발견, 4대강 환경평가 부실 '증명'" (한겨레신문, 0430) "탄소시장, CO <sub>2</sub> 감축이 기업지도 바꾼다" (한겨레신문, 0831) "태양을 벗삼은 무인자동차 '유라시아 대장정'" (한겨레신문, 1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대강 사업의 환경파괴를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으며 탄소시장, 친환경기술 등을 알리는데 노력하고 있음</li> </ul>
반부패	"태광그룹 '3대세습'에 편법증여 의혹 불거져" (한겨레신문 1012) "박영준 '선진연대 인맥', KB회장 선임 개입 의혹" (한겨레신문 0705) 과기평 '교과부간부 성접대' 비리 총리실, 조사하고도 1명만 해임 (한겨레신문 0806) "삼성은 MBC 내일 뉴스도 알고 있다?" (한겨레21 1105) "재계 사면·복권 청원 78명 리스트 단독 입수" (한겨레21 0101) ""돈주고 여론조사 왜곡 의혹' 울산 기초단체장·의원" (한겨레신문 03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광그룹의 편법증여의혹을 보도하여 부패사실을 밝히고 .경영권 상속에 대한 문제점을 알렸음</li> </ul>



- 한겨레신문에서는 2010년 8월 1일 ‘달동네 빈곤리포트’에서 기자가 직접 체험한 저소득층의 생활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 2010년 9월 9일에는 ‘교장의 교사체벌’에서 교사의 인권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 “3인가구 한끼 3500원...말문이 막혔다”

**1997 최저생계비로 한 달**  
달동네 빈곤리포트

**김소연 기자 '체험기'**

《한겨레》 김소연 기자가 7월의 한여름을 서울 성북구 삼선동에서 저개발 예정지역인 '장수마을'에서 보냈다. 참여연대의 '최저생계비로 한달 나기' 캠페인에 참여해서다. 김 기자는 이곳에 사는 박미영(가명·47)세와 아들 의당(가명·12·초등학교)의 모자가정이 들어가 3인가구를 만들어 지냈다. 세 식구는 3인가구의 올해 최저생계비 111만99원으로 한달 동안 생활했다. 이 체험을 토대로, 최저생계비의 현주소를 함께 올해로 시행 10년이 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시빈곤층에게 어떤 구실을 했는지 세 차례에 걸쳐 심층 점검한다.

가장이 저녁 사먹으면 나머지 식구 굶어아  
우유 1개 사면서 반찬값 줄어들라 눈물 '핑'  
옷 한벌 못사고 사회보험료는 생각도 못해  
28일만에 파산...16만원 적자도 기적이었다

‘한 끼를 3000원 이내로 해결하라!’ 한달 동안 참여연대에서 제공받은 111만99원으로 최저생계비 체험을 시작한 7월1일, 최우선 과제는 3000원으로 점심 을 먹는 일이었다. 현재 최저생계비 품목 에서 적잖게 더하는 가문의 점심 비용이 3000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첫날부터 문제가 생겼다. 가짜의 일어난 서울 종로구구 마포구 주변에는 아 무리 찾아봐도 3000원짜리 밥을 파는 식당 이 없었다. 평균이 5000원이다. 인터넷을 뒤 져 한 가게 3000원 하는 밥집을 찾아내긴 했으나, 갔다 오는 데만 30분 이상 걸리는

곳에 왔어 포기했다. 3000원으로 가능한 점 심은 라면과 김밥, 떡볶이 등 분식뿐이다.

첫 일주일엔 결국 혼자서 분식으로 점 심을 때웠다. 부실한 식사보다, 혼자 먹 는 기차를 할금할금 쳐다보는 다른 사 람들의 시선 때문에 ‘황막기’ 된 것 같아 힘들었다. 할 수 없이 일주일엔 한 번은 직장 동료들과 밥을 먹었고, 한 끼밖에 5000~7000원을 써야 했다. 점심값 평균 인 3000원을 맞추려고 일주일엔 한두 차 례는 도시락을 샀다. 반찬으로 김치를 가 지겠다가 기자실에 넣새가 퍼지는 바람 에 하루 종일 멍멍한 적도 있었다. 밥할



박미영씨 3인 가구의 한달 가계부

항목	최저생계비	실제지출액	비율
요리비용	41만7251	43215443	-0.217599
주거비	19만1595	2952	-0.253405
생활수도	7만4222	423700	-0.23442
기타생활	3만3102	5216900	-0.233581
교육비	4만3959	0	0.233559
보건비	4만9575	1만1950	0.236525
교육	4만5844	17215000	-0.235126
교통비	2만1637	3500	-0.231117
교통통신	11만9516	27216000	-0.221438
기타소득	6만7632	1만300	0.227532
소득세	4만6135	0	0.226135
합계	111만9919	122만4870	-1.09235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 항목에 7월에 모든 지출을

직 경험은,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달동네 장수마을은 서울특별시 4호 선 한성대입구역에서 삼선동역 방향으 로 가라면, 오른쪽입을 따라 20분가량을 걸어가야 한다. 밤 기온도 30도 이상으 로 느껴지는 어느 때운 날, 베고로 된 길에 비탈길을 오르다 보니 온몸에서 땀이 비 오듯 했다. 도저히 할 수 없이 슈퍼마켓 에 들어갔다. 5분 남짓 장시간 끝에 1000 원짜리 바나나우유를 사서 마셨다. 1000 원은 어쩔이나 두부를 사서 ‘편육’ 반 장을 만들 수 있는 돈이다. 마트속에서 이 런저런 가격표들이 종종 띠다나고, 우유 하나 마운 편이 마실 수 없다는 생각에 장시 눈물이 핑 돌았다.

최저생계비로 한 달 달동네 빈곤리포트 (2010. 8. 1)

### 학생들 지켜보는데...교장이 '교사 체벌'

경기 사립고서 복장 불량반 담임들에 '회초리' 학생들 '충격'...교육청 "설마했는데 사실 확인"

경기지역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교장이 '학생들의 복장 등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교실에서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담임교사들을 체벌한 사실이 밝혀졌다.

8일 경기도교육청 등의 말을 종합하면, 2학기 개학 다음날인 지난달 24일 경기지역 사립고에서 김아무개(81) 교장이 점심 시간에 1~3학년 학생들의 복장과 무발 상태를 점검하면서 이른바 '용의 복장'이 불량한 학급의 담임교사들에게 책임을 물어 체벌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당수 담임교사들은 절판 등에 손을 짚은 채 회초리로 엉덩이를 맞았으며, 해당 학급 학생들은 교장이 자신들의 담임교사를 체벌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일부 교사는 교



장 체벌을 거부하며 강하게 반발했다고 교육청은 전했다.

한 학생은 "화가 난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이지만 교장 선생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담임교사를 때리는 행위는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 학생은 "용의 복장 검사가 끝난 뒤 나와 보니 우리 반뿐 아니라 같은 학년 다른 선생님들도 똑같이 맞았다"며 "이 사실이 알려지면 학교 명예가 실추되고 학생들 취업도 어려울 것 같아 아쉬워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 학교는 1967년 중학교로 설립 인가를 받은 뒤 2000년 고등학교로 전환했으며, 김 교장은 1969년 중학교 교대 교장에 취임한 이래 41년째 교장을 맡아왔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7일 등 부 차례 이 학교에 감사반을 보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교장은 감사반에게 "복장 불량 불량 아이들을 야단치는 과정 에서 (학생들더러) '너희가 잘해야 한다'며 교사들에게 절판에 손을 대게 하고 회 초리로 엉덩이를 때리는 것을 흥내냈을

학생들 지켜보는데...교장이 '교사 엉덩이 체벌' (2010. 9. 9)

- 한겨레신문은 2010년 1월 19일 ‘사내하청’과 관련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노동현장을 보도했습니다.
- 한겨레21은 2010년 5월 21일 ‘삼성반도체’에서 발암성 물질 6종이 사용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 노동자 5명중 1명이 ‘사내하청’

## 원청노동자보다 6배 넘게 고용한 사업장도...노동자들 저임금·해고 노출

### 노동부 ‘300명 이상 사업장’ 실태조사서 확인

300명 이상을 고용한 국내 대규모 사업장의 노동자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은 사내하청 노동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간접고용’의 하나인 사내하청 노동자는 원청업체 정규직에 비해 임금 등 근로조건이 열악할 뿐 아니라 고용도 불안정해, 사내하청 확산에 따른 노동조건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관련기사 9면 18일 <한겨레>가 흥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노동부의 ‘사내하청도급 현황’ 자료를 보면, 2008년 고용보험에 등록된 300명 이상 사업장 963곳에서 일하는 노동자 168만5995명 가운데 36만8590명(21.9%)이 사내하청 노동자로 나타났다. 노동부 실태조사를 통해 사내하청 노동자 규모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종별로는 조선업에 사내하청 노동자가 가장 많았다. 현대중공업 1만9800명, 삼성중공업 1만5320명, 대우조선해양은 1만4000명이 사내하청 노동자였다. 이는 각각

원청업체 노동자에 견줘 79%, 147%, 125%에 해당하는 규모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조선업은 시장 상황에 따라 직업 불량이 크게 달라져, 적정 인원을 제외하고는 사내하청업체에 일을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내하청 노동자는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업 등 모든 산업에 걸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세계푸드(원청 1100명)는 4300명, 삼성에버랜드(\*670명)는 3194명, 커퍼닉코리아(\*420명)는 1182명이 사내하청 노동자였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원청 노동자가 933명인 데 반해 사내하청은 6112명이 나왔다.

이처럼 사내하청 노동자가 늘면서, 지난 3일 수도권인 한 대학에서 사내하청으로 일하던 한 청소용역 노동자가 재계약에 실패하자 음독자살을 시도하는 등 사내하청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06년 노동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자동차 업종의

**사내하청**  
형식상으로 하청업체에 고용돼 있지만 일은 원청업체에서 하는 고용형태다. 원청업체는 근로기준법상 의무는 지지 않고 임금을 더 내놓을 수 있으며, 도급계약 해지라는 방법으로 손쉽게 하청업체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다.

경우 하청 노동자가 원청 노동자에 견줘 월 노동시간은 11배이지만, 총급여액은 51.7%에 그치는 등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노동부는 지난해 7월 바정규직법 파동 직후, 당시 이영희 장관의 지시에 따라 사내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 지침 제정을 추진했지만 장관이 바뀌면서 유야무야된 상태다. 흥희덕 의원은 “노동부가 실태조사를 통해 사내하청이 광범위하게 확산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간접고용의 남용을 막는 법률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원 남종영 기자 wani@hani.co.kr

## 노동자 5명중 1명이 ‘사내하청’ (2010. 1. 19)

# 삼성반도체 ‘발암성 물질’ 6종 사용 확인

단독 입수한 전자·이음 원청조사에 영태-캐뎃-필로-위빙-원청 관련업체인 TCE 등, 40여 종 ‘자극성 물질도’

최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성전자 반도체 본사 4층 연구실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원들이 실험을 하고 있다. 연구원들은 실험실복을 입고 실험을 하고 있다. 연구원들은 실험실복을 입고 실험을 하고 있다.

삼성반도체는 발암성 물질 6종 사용 확인... (The rest of the text in the image is partially obscured or blurry, but the main headline and introductory text are clear.)

## 삼성반도체 발암성 물질 6종 사용 확인 (2010. 5. 21)



- 한겨레신문은 2010년 2월 10일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공사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보도했습니다.
- 2010년 8월 31일 ‘저탄소 녹색경영’ 관련 이산화탄소 감축과 탄소시장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 낙동강 퇴적토 조사 않고 정부 “문제없다” 거짓 해명

### 환경영향평가때 표층만 분석

정부가 4대강 사업의 하나인 ‘낙동강살리기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강바닥 아래 퇴적토의 오염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정부는 최근 이 사업 공사 현장에서 맹독성 물질이 포함된 퇴적토가 나오자 환경영향평가 결과 퇴적토가 문제없는 것으로 이미 밝혀졌다는 거짓 해명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4면

국토해양부와 부산국토관리청은 지난해 7월 내놓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1권역)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서, 2009년 7월18일부터 23일까지 11일 동안 낙동강 바다 10곳의 하천 저질(강바닥 퇴적층)을 조사한 결과, 오염도가 모두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하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보고서에는 “이번 조사는) 표층 시료를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준설토 오염 여부를 정확히 판단

하기 위해서는 퇴적층의 층별 분석이 필요하다”며 “추후 시추조사를 통해 퇴적층별로 분석해 본평가 시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라는 단서를 붙여놓았다. 강바닥 아래 퇴적토의 오염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으나 본평가서에는 이를 조사해 답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부달 뒤인 지난해 9월 나온 본평가서를 보면 추가조사 없이 ‘초안’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수행업체인 동부엔지니어링(주)은 9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본안 사이의 기간이 부달뿐인데다 실제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은 한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마침 그 기간에 큰비가 와서 강바닥 아래 퇴적토를 채취할 수 없었다”며 “어쩔 수 없이 퇴적토 조사를 사후 환경영향평가로 연기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퇴적토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시인한 것이다. **창원/최상원 기자 csw@hani.co.kr**

낙동강 퇴적토 조사 않고 정부 “문제없다” 거짓 해명 (2010. 2. 10)



탄소시장, CO<sub>2</sub> 감축이 기업지도 바꾼다 거짓 해명 (2010. 8. 31)



한겨레신문사에서는 UNGC 10대 원칙을 준수하고 보다 적극적인 지지 활동을 이행하기 위해 한겨레경제연구소를 설립하였으며, 다양한 연구 및 교육 활동을 통해 CSR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인식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연구·교육		
	활동	성과
CSR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중일 CSR공동연구 : 공급망 관리, 이해관계자와의 대화, 성평등 활동 중심으로</li> <li>• 한중일기업 사회책임경영 평가 East Asia 3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아시아 3개국의 CSR전문가 미팅을 통해 동아시아 특성이 반영된 CSR 개념 확산</li> <li>• 기업 및 공공기관의 비재무정보 공개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li> </ul>
CSR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다솜이재단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컨설팅 및 검토</li> <li>•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전략수립 컨설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한 기업의 비재무적 정보에 대한 공개 유도</li> <li>• 기업의 체계적인 사회적 책임 활동</li> </ul>
지자체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택시 사회적 기업 컨설팅</li> <li>• 서천 지역경제 활성화 컨설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 특성에 부합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활동 확산</li> </ul>
교육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시아미래포럼</li> <li>• 사회공헌 프로그램 공모전</li> <li>• 윤리적소비 공모전</li> <li>• 사회적기업가학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SR의 개념 확산</li> <li>• CSR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li> </ul>



한겨레신문사에서는 UNGC 10대 원칙을 준수하고 보다 적극적인 지지 활동을 이행하기 위해 회사 내부 규칙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체계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활동과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공약	체계 및 활동	성과
<b>인권 1,2</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GC 기준 지지</li> <li>• 한겨레사규 5장 46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리후생제도</li> <li>• 육아출산휴가</li> <li>• 학자금 지원제도</li> <li>• 임직원 4대 보험</li> <li>• 주5일 근무 제도</li> <li>• '짬' 카페 등 편의시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가사용율 증가</li> <li>• 학자금 지원금액 증가</li> <li>• 보건 및 안전 협약 규정 마련</li> <li>• 사내외교육 1265건 실시</li> </ul>
<b>노동 3,4,5,6</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GC 기준 지지</li> <li>• 한겨레 단체협약 조항</li> <li>• 한겨레 취업규칙 16, 18조</li> <li>• 한겨레 취업규칙 호봉규정</li> <li>• 한겨레 사규 제79조 '모성보호와 남녀평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변동에 대한 상황 조치</li> <li>• 인사위원회 및 윤리위원회</li> <li>• 여성 및 소수집단 채용정책</li> <li>• 육아출산휴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요 사업변동에 대한 단체협약 규정에 명시</li> <li>• 노동조합 가입 비율 88%</li> <li>• 차별금지 정책을 마련해 불평등 지양</li> <li>• 정규직 비율 증가</li> </ul>
<b>환경 7,8,9</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GC 기준 지지</li> <li>• 국제적 수준의 환경문제 사전 예방을 위한 공약 필요</li> <li>• 국제적 수준의 기업 환경 책임 증진을 위한 공약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스 절약 및 물자원 재활용</li> <li>• 에너지 절감활동 (절감형 안정기 교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자원 사용량 감축</li> <li>• 전기사용량 감축</li> <li>• 안정기 교체로 인한 에너지 절감</li> </ul>
<b>반부패 10</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GC 기준 지지</li> <li>• 한겨레 윤리강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설명회</li> <li>• 윤리위원회</li> <li>• 계약서 개정 및 특약서 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 및 위반 건 수 없음</li> <li>• 윤리위원회 1회 개최</li> <li>• 경영설명회 3회 개최</li> </ul>

# 복리후생

## 인권

원칙1: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원칙2:기업은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 공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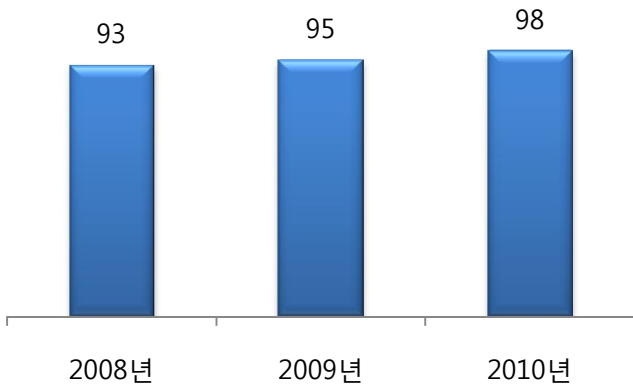
한겨레신문사에서는 2007년 8월 언론사 최초로 유엔글로벌컴팩트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적 수준의 '인권보호'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규 제 5장 46조에 근거하여 '임직원에게 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는 쾌적한 노동환경을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체계 및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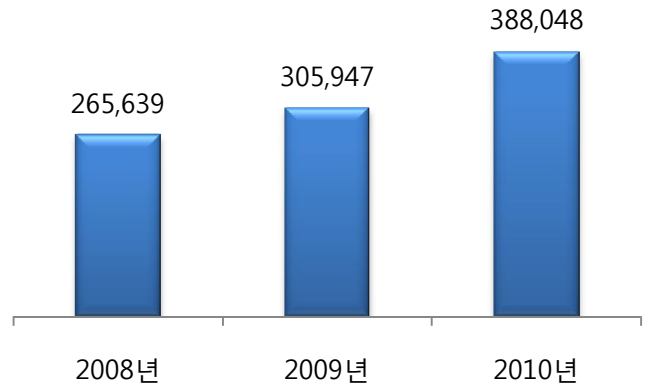
한겨레신문사는 임직원들의 쾌적한 근무환경을 위해 정기휴가, 여가생활, 의료/건강, 교육 등 다양한 복리후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윤택한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자녀학자금, 의료서비스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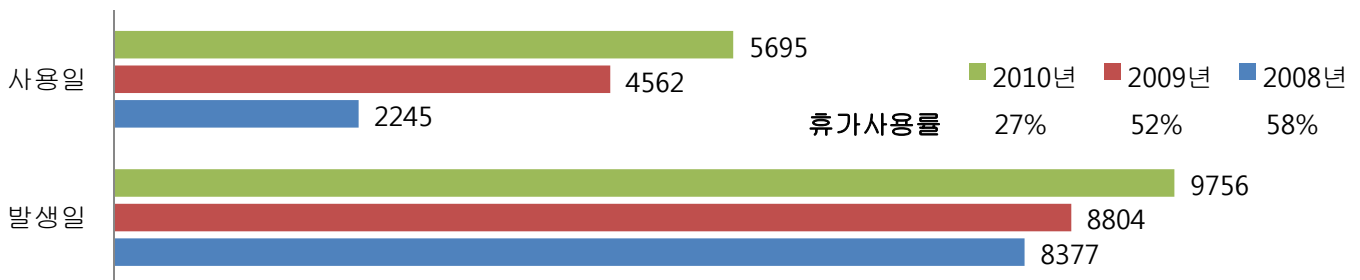
임직원 건강검진 (%)



학자금보조 (천 원)



2010 휴가사용



# 보건 및 안전

## 인권

원칙1: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원칙2:기업은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 공약

한겨레신문사에서는 2007년 8월 언론사 최초로 유엔글로벌컴팩트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적 수준의 '인권보호'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규 제 5장 46조에 근거하여 '임직원에게 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는 쾌적한 노동환경을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체계 및 활동

한겨레신문사는 '보건 및 안전 정식 협약 체결'을 통해 임직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업무환경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및 훈련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작업장 안전에 대한 외부검증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성과

보건 및 안전에 대한 규정

구분		Yes	No
보건 및 안전 정식 협약 체결유무	보건 및 안전과 관련된 정식 협약이 노동조합과 체결되었는지 유무	○	
보건 및 안전에 관한 정식 협약이 다루고 있는 사항의 유무	개인 보호 장비 지급	○	
	노사 공동 보건안전 위원회 운영	○	
	보건 및 안전검사, 감사 및 사고 조사에 대한 근로자 대표 참여	○	
	교육 및 훈련 규정 비치	○	
	불만 사항 해결 체제 존재 여부	○	
	안전하지 않은 작업을 거부할 권리	○	
	작업장 안전 외부검증 프로그램 수행	○	

# 교육

## 인권

원칙1: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원칙2:기업은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 공약

한겨레신문사에서는 2007년 8월 언론사 최초로 유엔글로벌컴팩트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적 수준의 '인권보호'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규 제 5장 46조에 근거하여 '임직원에게 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는 쾌적한 노동환경을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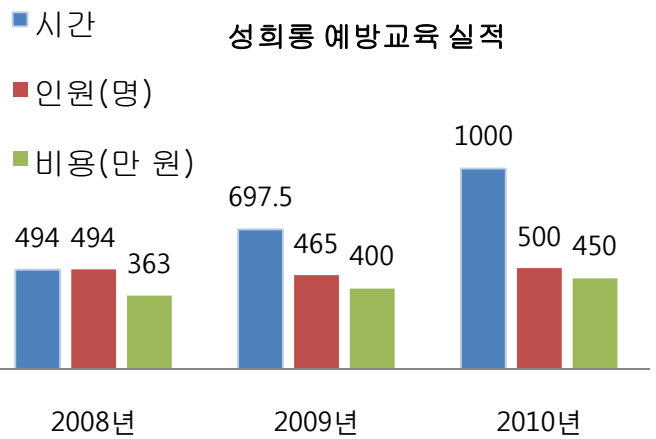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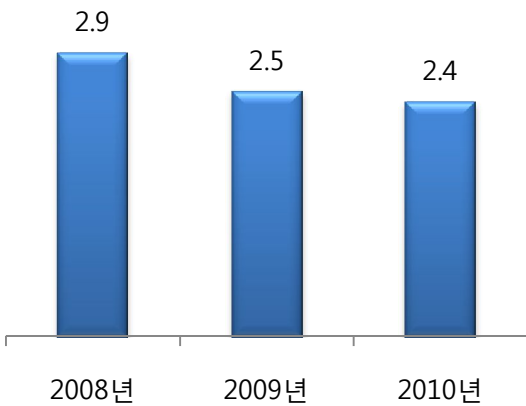
### 체계 및 활동

한겨레신문사에서는 임직원의 현업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성희롱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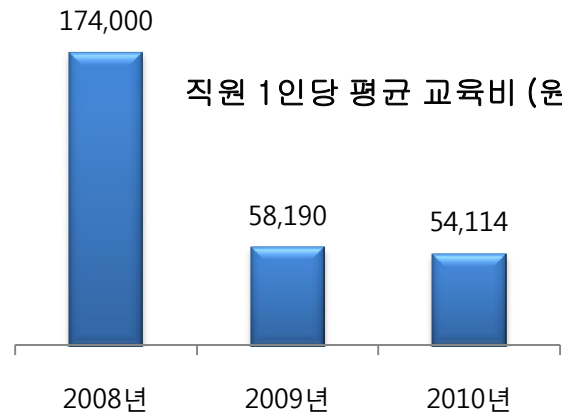
### 성과

교육 유형별 연간 건 수	온라인	340
	오프라인	925
	사내	834
	사외	429
	기타	2
평균 교육비 (원)	54,114	

연평균 교육건수



직원 1인당 평균 교육비 (원)



- 온라인 교육은 인터넷, 독서통신, 전화 등을 활용하여 실시
- 온라인 교육의 비중이 높아 교육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교육 건 수로 대체
- 교육비 지출 내역이 감소는 외부기관 지원 교육이 증가 때문임

# 노사협의회

## 노동

- 원칙3: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원칙4:기업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여야 한다.
- 원칙5:기업은 아동노동을 효과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
- 원칙6:기업은 고용 및 업무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

### 공약

한겨레신문사는 사규 '단체협약'에 근거해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여 노동조합 설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겨레신문지부와의 성실한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체계 및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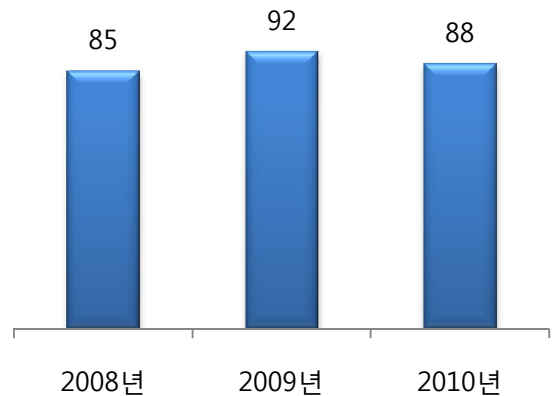
한겨레신문사는 노동조합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과 그 정당한 행동을 보장합니다.  
또한 공식적인 노사협의체 '노사협의회'를 매년 1~2회 열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인센티브 지급, 경영진 선출제도 개선 등에 대해 노동조합과 논의합니다. 그리고 임직원의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 단체협약 규정에 다양한 사업변동에 대한 조치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성과

주요 사업변동에 대한 규정

주요사업변동	단체협약 규정에 명시여부	
	Yes	No
회사의 분할, 합병, 출자회사 설립 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 또는 타기관에 양도하고자 할 때, 이에 따른 조합원의 신분 변동이나 근로조건 변경 때	○	
취업규칙 및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 규칙을 제정 또는 개폐할 때	○	
계열사간 전직, 격지간 전보시, 타 직종으로 전환 배치할 경우	○	
조합간부(조합규약상의 임원, 전임자)에 대한 인사를 할 경우	○	
공개 경쟁방법에 의하지 않는 채용시	○	
회사는 증면(혹은 감면), 새로운 매체 창간(혹은 폐간) 및 근무지 변경 등으로 조합원의 근무조건을 현저히 변경 시키게 될 때	○	

노동조합 가입비율 (%)



2010년	
노조 가입 대상 구성원 수 (명)	532
노동조합 가입 구성원 수 (명)	467
노동조합 가입 비율 (%)	88



# 차별금지제도

## 노동

- 원칙3: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원칙4:기업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여야 한다.
- 원칙5:기업은 아동노동을 효과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
- 원칙6:기업은 고용 및 업무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

### 공약

한겨레신문사는 사규 79조 '모성보호와 남녀평등'을 근거로 하여 모성보호나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을 우대하는 것을 남녀차별로 보지 아니하며 남녀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여성 우대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과 모든 노동조건에서 특정 성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하지 않고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체계 및 활동

한겨레신문사에서는 임직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방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경영진이 함께 참여하는 인사위원회, 윤리위원회를 열어 공식적으로 처리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자직, 경영관리직 모두에게 평등하게 일괄 적용되는 단일 호봉제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직군별 상대적 불평등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 성과

여성 및 소수계층 채용 우대정책

구분	채용 우대정책
여성	해당사항 없음
장애인	서류전형시 가산점 부여
국가보훈자	서류전형시 가산점 부여 채용 진행시 보훈청에 의뢰해 특별추천서 접수
지역주민	해당사항 없음

차별금지 조치사항 및 내용

구분	Yes	No	내용
차별금지에 대한 제도 마련	○		성희롱 예방 지침 사규 제정 시행
불만/고충에 대한 내부 신고제도 운영	○		단협상 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항이 있으나 실제로 가동되고 있지 않음
차별금지를 위한 수시 진단 실시 (모니터링 프로그램)		○	인사위원 중 여성위원을 1명 이상 두도록 해 인사 전 영역에서 정책적 또는 의도적으로 여성이 차별받지 않도록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음.
차별사건에 대한 사후관리 프로세스 운영		○	<인사위원회 규정>에 이의 제기 조항 및 징계 조항을 두어 차별 사건에 대해 사후 관리를 하고 있음.
차별금지에 대한 성과지표 관리		○	

# 고용 현황

## 노동

- 원칙3: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원칙4:기업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여야 한다.
- 원칙5:기업은 아동노동을 효과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
- 원칙6:기업은 고용 및 업무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

### 공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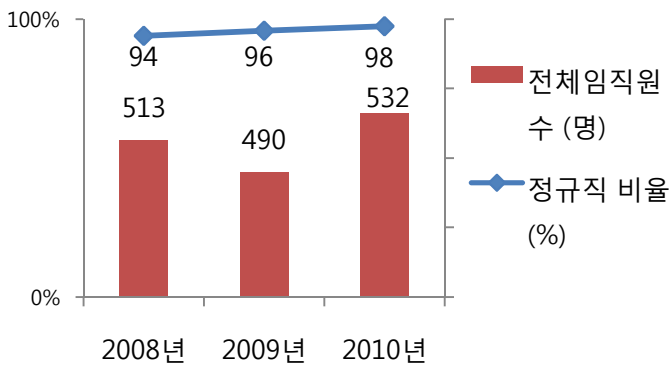
한겨레신문사는 사규 79조 '모성보호와 남녀평등'을 근거로 하여 모성보호나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을 우대하는 것을 남녀차별로 보지 아니하며 남녀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여성 우대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과 모든 노동조건에서 특정 성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하지 않고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체계 및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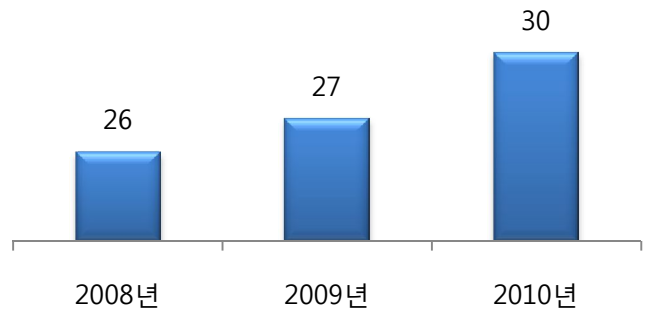
한겨레신문사의 전체 임직원 고용은 2010년 532명으로 집계 되었으며, 그 중 정규직 비율 또한 전년 대비 2% 포인트가 증가한 9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직원 채용에 불평등한 제약을 두지 않고 있으며, 여성 인적자원 관리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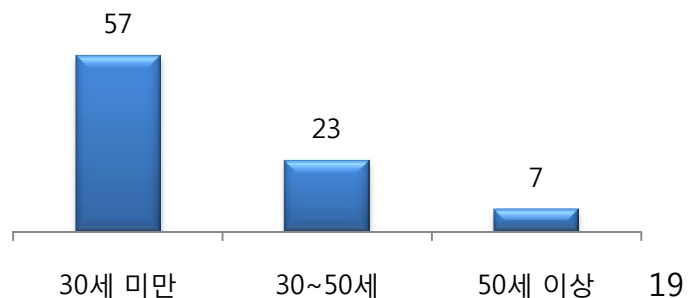
전체 직원 수 및 정규직 비율



여성직원 비율 (%)



연령대별 여성직원 비율(%)



	2008년	2009년	2010년
여성	132	133	159
여성 비율 (%)	26	27	30
장애우 (명)	5	4	4
국가보훈자 (명)	4	4	5
전체임직원 수 (명)	513	490	532

# 가스 및 물자원

## 환경

- 원칙7: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여야 한다.
- 원칙8:기업은 환경에 대한 책임강화에 솔선하여야 한다.
- 원칙9:기업은 환경 친화적인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장려하여야 한다.

### 공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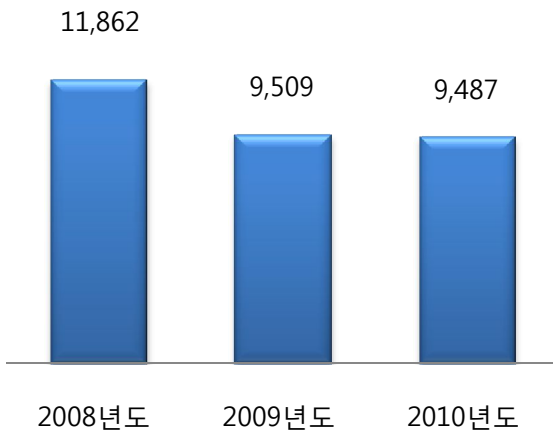
한겨레신문사는 사규를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은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2007년 8월 유엔글로벌콤팩트에 언론사 최초로 가입함으로써 국제적 수준의 환경문제 예방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체계 및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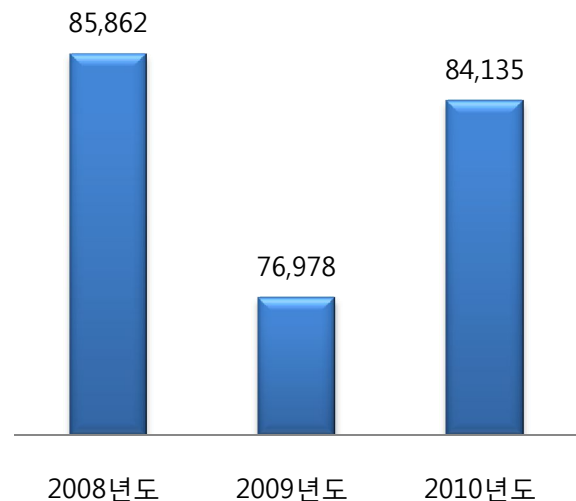
가스는 냉온수기(냉방,난방)가동, 운전실 난방, 겨울철 난방, 운전실 샤워용 온수, 세면대 온수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하수도는 시수와 정수로 나누어지는데, 시수는 세면대등에 사용하고 정수는 기계냉각수, 화장실좌변기, 소변기 등에 재활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성과

상하수도(㎥)



가스사용량(㎥)



한겨레에서 기계 냉각수로 사용되는 물을 화장실 소변기, 대변기에 재사용하고 있음  
(상하수도 사용량에 대해서는 추가자료 제출예정임)  
옥상 우수관련 150톤 탱크에 저장하여 3층, 9층 정원수로 재사용하고 있음

# 에너지사용

## 환경

- 원칙7: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여야 한다.
- 원칙8:기업은 환경에 대한 책임강화에 솔선하여야 한다.
- 원칙9:기업은 환경 친화적인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장려하여야 한다.

### 공약

한겨레신문사는 사규를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은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2007년 8월 유엔글로벌콤팩트에 언론사 최초로 가입함으로써 국제적 수준의 환경문제 예방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체계 및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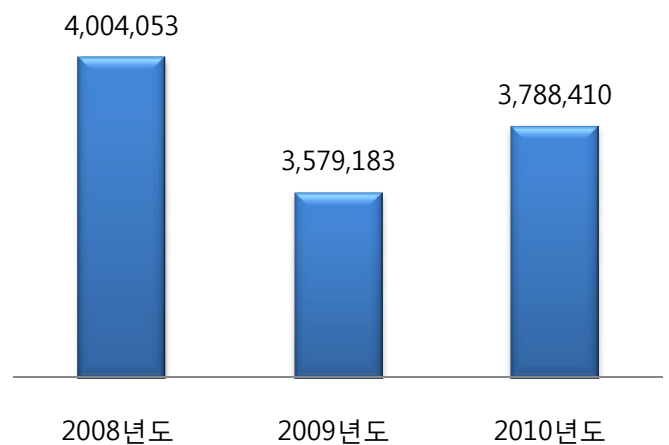
한겨레신문사에서는 2010년 약 976wh(시간당)의 에너지를 절감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단, 전력사용량은 신문 및 외간발행의 생산 부수에 따라 격차가 생기게 됩니다.

### 성과

안정기 교체를 통한 에너지 절감

절감형 안정기 교체	관련내용 기재
2008년도	안정기 교체로 16w x 47개=752wh (시간당 절감)
2009년도	안정기 교체로 16w x 110개=1760 wh (시간당 절감)
2010년도	안정기 교체로 16w x 73개=976 wh (시간당 절감)

전기사용량(kwh)



# 윤리경영

## 인권

- 원칙1: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 원칙2:기업은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 공약

한겨레신문사에서는 2007년 8월 언론사 최초로 유엔글로벌컴팩트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적 수준의 '인권보호'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사 최초의 윤리강령을 만들어 업무와 관련해 지위를 이용한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사전에 제한하여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 체계 및 활동

한겨레신문사에서는 사규에서 한겨레신문 윤리강령, 한겨레신문 윤리강령 실천요강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사항에 대한 시행과 감시를 위한 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국과의 거래관계에서 수차례의 계약서 개정과 특약서 제정 등을 통해 계약 기간의 설정 및 보증인의 한도 금액을 지정함으로써 법적인 분쟁의 소지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 성과

- 한겨레신문사에서는 판촉 과정 중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을 문 지국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위반 사항을 각 지국으로 개별 통보되기 때문에 혹시 파악하지 못한 지국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 거래 관계에 있어서 본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수 년간 법적인 분쟁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 2010년도 윤리위원회

일시	안건 및 조치사항
2010. 05	안건 : 디지털미디어본부에서 모 기업과 광고국의 요청을 감안해 기업의 고위 간부와 연관된 부정적 내용의 기사를 유명 포털사이트에 공급하지 않음
	조치사항 : 윤리위원회 규정 제8조 1항에 의거 '위원장 경고' 조치 후 심의결과 사내 공지

#### 2010년도 경영설명회

분기	주요 안건
상반기	2010년 상반기 경영실적 및 인센티브제 개선방안, 모바일 전략보고
3분기	3분기까지의 경영실적, 광고시장 동향 및 대응 계획, 모바일 전략 진행상황 및 계획, 디지털 매거진 준비상황
4분기	2010년 경영실적 평가, 2011년 대응 및 계획 (국내 경제상황 및 미디어 환경, 경영목표, 추진과제, 경영계획, 통합뉴스룸 구축(안) 등)